

투데이

전남 친환경 인증 취소 전국 최다

3년간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4555건 전국의 62%나... "확실한 관리체계 필요"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 1번지'인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 취소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업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정책에 따라 친환경 인증 면적이 증가하면서 해당 농가들의 부주의 등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철저한 검증 없이 민간 인증기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발급한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농산물관리원이 4일 내놓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남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 기준을 위반,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 표시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45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의 행정처분 건수는 7360건으로, 전남은 전체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연도별 행정처분 건수는 ▲2008년 1185건(인증 취소 1157건·인증 표시 사용정지 28건) ▲2009년 1257건(인증 취소 1216건·인증표시 사용정지 41건) ▲2010년 2113건(인

증 취소 2086건·인증표시 사용정지 27건)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증 이후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계속하지 않다가 적발돼 인증 취소·인증 표시 사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해마다 전체 행정처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전남의 행정처분 건수는 전체 건수(2896건)의 73.0%에 달하고 2009년엔 전체 2112건 가운데 59.5%를 차지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친환경 인증 면적(9만8112ha)이 전국(19만4006ha)의 50.6%에 달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 중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지역별 행정 처분 건수도 가장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남에 이어 경북(241건), 전북(185건), 충남(108건),

경남(81건) 등의 순으로 행정 처분 건수가 많았고 2009년에도 전남, 경북(273건), 경남(124건), 경기(94건), 전북(9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인근 도와 통합해 집계했다는 게 국립농산물관리원측 설명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이에따라 정부가 인증기관간 통폐합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한 확실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앞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의 신뢰에 위기가 오면 친환경농업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도내 민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증 남발을 우려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UEA 광주정상회의 D-100... 성공개최를”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D-100일 행사가 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열렸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들은 이날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농어촌公 'J프로젝트' 전면전

道 "지연책임 떠넘기기 생떼쓰나" 재반박

영암·해남 관공래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둘러싼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간 대립이 '사생결단'식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J프로젝트 포기 검토" 발언 이후 농어촌공사가 반박 자료를 내자 전남도가 즉각 재반박 자료를 내놓는 등 본격적인 전투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현 정부가 적극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남도는 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

자간담회를 열고, 'J프로젝트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이란 제목의 농어촌공사측 발표를 반박했다.

전남도는 농어촌공사와의 해당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적용 ▲감정평가 참여기관 수 ▲감정평가액 차이 인정 범위 등 모든 기준에서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추진할 정도로 양보해왔는데,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생떼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특히 구성지구 감정평가 결과의 경우 3.3m당 제시된 2만1157원의 평가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것인데도, 농어촌공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평가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어촌공사가 3년 전인 2008년 구성지구내 일부 간척지 4곳만을 평가해 나온 3.3m당 금액(7만3550원)은 대표성이 없는 만큼 이번 감정 평가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1 경주장 부지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책임이 대화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이종적인 입장 때문이라는 농어촌공사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어촌공사의 지나친 개입

으로 한국감정평가원이 평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만 평가기관을 바꾸려했던 카보 때문이 아니라는 게 전남도 주장이다.

전남도 송영종 투자정책국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J프로젝트 사업추진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양도·양수 지연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도시 투자사들을 고려한다면 농어촌공사는 그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J프로젝트는 지난 2003년 6월 사업 구상이 나온 뒤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구체화됐고 2005년 8월 시범사업 대상지(구성·삼호·삼포·부동)가 선정되면서 추진돼왔지만 부지 양도·양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리산 천은사 일대 특별보호구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일대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해 출입을 제한한다.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소장 김진광)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천은사 저수

지 일원 53만5000㎡를 특별보호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천은사 저수지 일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왕과 제330호 수달,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삿 등이 서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됐던 곳이다.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 분포지역을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지리산에서는 노고단 정상부 일원(탐방로 제외), 반북대 자연보존지구(탐방로

제외), 성삼재~노고단~반야봉~삼도봉~통곡봉 일원(집단지식지, 마늘지구, 탐방로 제외), 천은사 저수지 일원 등이 '특별보호구'로 지정됐다.

신규지정된 천은사 저수지 일원은 2030년 12월31일까지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남 클러스터사업단 농림부 전국평가 석권 국비 30억원 인센티브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클러스터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영암 무화과와 무안 고구마 등이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돼 국비 3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부가 전국 43개 클러스터 사업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성과 달성도 및 연구 산업화, 공동브랜드 관리, 수출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전국 최우수 사업단으로 영암 무화과와 무안 고구마사업단이 각각 선정돼 국비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또 곡성 멜론과 구례 산수유도 각각 국비 4억원, 전남딸기는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클러스터사업은 지역 특화품목을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 생산부터 유통·가공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면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영암농축무화과주식회사, 무안항토고구마주식회사, 전남딸기주식회사 등 10개 회사에 580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사업단은 지난 한 해 1471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사업을 시작한 2005년 대비(458억원) 321%가 증가했으며, 고용창출도 108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가공식품 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뉴스 브리핑

동물학대자 내년부터 징역·벌금

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고 밝혔다.

또,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

다주택자 '물막지' 내년까지 2주택자만 구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줄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막지'의 구제 대상이 2주택(지분)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보유 지분중 1개 외에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

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줄기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주택(지분)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분양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건보 본인부담 상한초과 진료비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

한 진료비를 이르면 13일부터 환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진료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2009년에 비해 1만명 정도 줄었으나 환급금 총액은 4631억원으로 130억원 가량 늘었다.

경매투자

- 공동투자 및 자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주)일화 기획생산 호남지사모집

당사는 (주)일화의 기획생산 공식지정업체로
향양, 향당노로 세계특허 10개획득한
신물질 발효인삼·홍삼을 취급할
호남지역 파트너를 구합니다

전원내츨렐 F&D
www.fnd.or.kr
고객센터 0505-302-1111

주식회사 일화

한자교육 <천자문과 한자성경> 혁명으로 배우는 한자교육

<아동 : 00명, 성인 00명을 3개월, 1년 과정 모델교실에 특별 초대함>

한자성경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쉽게 익히게 됩니다!

한글은 3장 정도만 자유롭게 읽는 분야입니다. 한자성경은 한자전문이 아니므로 기본 장 및 장만 읽기 되면 한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은 한글처럼 통사리에 알게 되고 한자성경 사용교과에 1년 정도 출석만으로 4000여 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천자문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쉽게 익히게 됩니다!

천자문은 고대 중국서사로 삼황시대까지 40여명의 인물과 나라, 지명, 약어(준말)와 옛날 읽기교재로 배우게 되면(방문자 5분)에 읽는 천자문 중 정(단)기간에 천자문을 누구든지 예전처럼 쉽게 배우고 한자를 한글처럼 아는 지름길이 됩니다.

• 시범강좌 및 교육설명회
7월 10일(주일)오전11시 예배와 오후 2시, 7월 7일, 21일(목요일) 오전10시 (준비관계로 사전접수요망)

• 찾아오시는길 : 광주 수원지구 성덕중학교 건너편 피리비게트 뒤편 에덴의교회 ☎연락처 : 010-3911-3907 062 433 3907
강사 : 전재웅원장 (한자교육연구소장, 10년간 한자교육방법연구 한지는 한글보다 쉽다 저자)

성경주문(각쪽 30,000원, 비닐20,000원, 찬송가합본 40,000원 택배비포함)성서공회발행 <교육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주문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 ☎ 010-2218-1255

한자교육(전도학교)연수원(시 군 구 지부 모집 중임)
광주시 광산구 광산로 정덕동 1086번지성덕중학교 건너편
☎ 062-433-3907
• 한자교육연수원 cafe.daum.net/jeodanglove
• 메일 : junhanja@hanmail.net

정부공사 조기발주, 자재확보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건축, 토목 공사 자재공급 안내

- 원석 현장직구입 가능 (물량대량확보)
① A급 : 재당 5,500원 ② B급 : 재당 5,000원
③ C급 : 재당 3,000원 이상
- 견치석 현장직구입 가능 (물량대량확보)
① 공사용(30×30×35) : 900원 ② 요축용(25×25×30) : 900원
※비수요기로 가격 100원 인하
- 전석/사석 현장직구입 가능 (물량대량확보)
① A급 : 25톤 차량 190,000원 ② B급 : 25톤 차량 170,000원
- 판재
① 반재공급(반재대량확보) ② 완재공급
- 골재 전품목 공급 *전 품목 현장 상차도 기준

문의전화 : 010-9199-7000 010-7171-5382

WWW.MODONG.CO.KR

(채석장소재) 모동기업사 (판재공정) 모동석재(주)
주소 : (670-853)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 전화 : (055)944-5382 / FAX : (055)944-5381 H·P : 010-7171-5382 modong@kookil.net
주소 : (670-852)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5 전화 : (055)943-8946 / FAX : (055)943-8947 H·P : 010-3550-6678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꺼이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 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역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자금용이사항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 KBI세-80%+a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3.93%~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